

현장속으로 시민결로

# 주요 업무 보고

2025. 6.

현장민원담당관

# 현장민원담당관

① 규제철폐 직원제안 운영 현황 보고

---

② 규제철폐 시민제안 운영 현황 보고

---

## 1

## 규제철폐 직원제안 운영 현황 보고

현장민원담당관 :한휘진☎2180-8901 현장민원총괄팀장:김정열☎8902 담당 : 박지영/김시환☎8903/8904

## □ 사업개요

## ○ 추진방향

- 일상 속 규제철폐 아이디어의 제도화로 생생한 생활정치 구현
- 입법기관으로서 조례·규칙 제·개정 등 신속한 제도개선 결과 도출

## ○ 추진근거

- 일상 속 규제철폐를 위한 직원 제안 제도 추진 계획(의장방침 제202호, 2025. 05. 21.)
-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7조

## ○ 주요내용

- 대 상 :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전 공무원
- 기 간 : '25. 6. 4 (수) ~ 7. 4 (금)
  - ※ 필요 시 기간 연장 가능
- 주 제 : 규제철폐 관련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규칙에 대한 제안

## □ 추진계획

## &lt; 추진절차 &gt;

구분	접 수	분 류	심사(1차)	선정(2차)	활 용
역할	제안접수	기 제·개정된 조례와 유사여부 검토 등	1차 심사(3배수)	대상 1, 최우수 1 우수 1, 장려 2	조례 규칙 제개정 안전상정
주체	직 원 ⇒ 현장민원담당관	현장민원담당관	심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10명 내외)	선정위원회 (시민권익위원회)	해당 상임위
시기	'25.6월초~7월초	'25.7월중순	'25.7월말	'25.8월초	회기시,수시

## □ 제도의 필요성 및 목표

- 불필요 규제: 시민 비용 및 시간 낭비 초래
- 규제 제정·운영: 시민 부담 최소화 지향
- 적절 규제: 공공성 유지 및 과도한 사적이익 방지 필수

## □ 규제개혁의 이해

### ○ 규제개혁의 정의

- OECD 규제개혁 정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부규제의 품질(Regulatory Quality)을 향상시키는 과정

### ○ 규제철폐의 목표

- 규제비용의 감소 및 행정편의 증진(행정절차 부담 경감 및 기간 단축)  
※ 규제비용 : 준수비용(규제 준수 부담 포함) 및 기회비용(신기술·신산업 발생 불가, 소득·고용창출 기회 상실)을 합산

### ○ 여러 가지 규제철폐 방법

- 불필요 규제(중복규제) 및 절차 폐지 또는 간소화
- 획일적 중앙규제를 하위기관의 분권형 규제로 전환(예, 대형마트 휴일지정)
- 부정 및 권한의 남용 가능성이 높은 모호한 규제의 투명화(예, 건축심의)
- 신규 영역(AI 등 신기술) 확장을 위한 기존 규제개혁
- 정책의 수요계층 확대

### ○ 규제철폐 시 유의점

- 모든 규제철폐는 이해관계자간의 갈등과 역효과가 발생 가능하므로 규제철폐안은 갈등·역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함
- 규제는 현장에서 지킬 수 있어야 함(예, 화학물질관리법)

## 심사 기준표

항목	평가요소	배점
점 수 합 계		100점
창의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이 기존의 방식과 차별화되어 참신하게 문제를 바라보는가 (독창성)</li> <li>기존의 생각들을 잘 조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변환하였는가 (융합성)</li> <li>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변화시켰는가 (융통성)</li> </ul>	
실행 가능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위법, 타 법령과 일맥상통하고 충돌하지 않는가 (법적충돌여부)</li> <li>현재의 조직, 예산으로 행정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무리가 없는가 (행정적 실행가능성)</li> <li>현장에서 지킬 수 있나 (준수성)</li> </ul>	
효율성(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비용이 많이 감소하는가 (규제비용 감소효과)</li> <li>만약 예산이 투입된다면 투입 대비 효용이 확실하게 높은가 (예산대비 효과)</li> </ul>	
적용 범위(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규제효과로 인해 영향을 주는 지역 범위가 국부적인가 아니면 광역 또는 전국 단위까지 확장 가능한가 (지역적 영향범위)</li> <li>규제효과로 인해 도움을 받는 대상계층은 넓은가 (대상계층의 범위)</li> <li>앞으로 타 기관, 중앙정부 등과의 협업으로 확장이 가능한가 (확장가능성)</li> </ul>	
계속성·안정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효과로 인한 효과가 지속가능한가 (지속성)</li> <li>조직·예산 등 모든 면에서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가 (안정성)</li> </ul>	

## 2

# 규제철폐 시민제안 운영 현황 보고

현장민원담당관 : 한휘진 ☎2180-8901 현장민원총괄팀장 : 김정열 ☎8902 담당 : 박지영/김시환 ☎8903/8904

### □ 추진방향

-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 집중 신고 창구 운영
-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시민 의견 검토 후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입법기관으로서 규제철폐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에 집중

### □ 추진근거

- 일상 속 규제철폐를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추진 계획(의장방침 제60호, 2025. 02. 11.)

### □ 주요내용

- 규제 집중 신고 창구 ‘규제없소’ 로 접수된 제안 중 제도개선 과제 발굴

#### ※ 「규제없소」 운영 개요

- 기 간 : '25.3.17~
- 대 상 :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시민 제안
- 운영방법 : 의회신문고 관리자시스템에 연동하여 운영

- 의회신문고 접수 민원 중 규제와 관련된 사안 검토
- 의정모니터 지정주제(규제철폐 관련 제안) 접수의견 검토

### □ 추진실적

- 규제없소 : 에코쉘터 설치 조례 개정 제안 등 9건
- 의회신문고 민원 : '23년부터 현재까지 약 6,000건의 민원 중 규제철폐 관련 선별
- 의정모니터 제안 : 자치구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를 인근 자치구까지 확대요청 등 2건

### □ 향후 일정

- 상시 제안 접수 및 사전검토 실시 : ' 25. 6월 ~

## □ 주요 제안 내용

구분	유형	분야	시민제안	주요내용
1	조례 제개정	교통환경 안전	서울시 에코쉘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기존) 현행 서울시 조례상 에코쉘터 설치에 대한 내용부재 (제안) 에코쉘터 추가설치 가능토록 근거 조례 신설요청 (검토) 조례 제개정 시, 지자체별로 다른 스마트쉘터 설치 일률적 기준 마련. 버스승차대와 스마트쉘터 중복 투자 방지 가능. 실현가능성과 효용성은 있어 보이나 버스정책과는 안전문제로 부정적 입장
2	법령개정	건설 주택	국민주택 규모 제한 철폐 제안	(기존) 국민주택 규모 제한(전용 85㎡ 미만) (제안) 국민주택 규모 제한 철폐 → (현장민원과 수정제안) 전용 60㎡ 미만으로 국민주택 규모조정 (검토) 발코니확장 및 가구수 감소 등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60㎡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성 있고, 예산 절감 등 효과가 예상되나, 국민주택 규모와 연동된 세금, 복지 등 각종 타법 개정이 동시에 필요하여 실현하기가 어려움
3	법령개정	건설 주택 일반행정 /복지	장애자녀 양육하는 가정도 임대주택 혜택 주세요	(기존)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장애인 본인에게는 가점이 있으나,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가점은 없음 (제안) '(중증)장애인 자녀' 가구를 위한 항목 신설 (검토)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임대주택 가점제도를 통해 지원할 필요성 있음
4	조례개정	일반행정 /복지	독립유공자 유가족도 공영주차장 할인 받을 수 있게 조례개정요청	(기존) 독립유공자는 본인에 한하여 공영주차장 할인 (제안) 독립유공자 유가족에게도 공영주차장 할인을 확대 (검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에 따라 그 유족에게도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 강남구, 과천시의 유족 주차요금 할인 사례에서 볼 때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한 형평성 확보 가능
5	법령개정	일반행정 /복지	지하도상가 임대료 감면	(기존) 현행 공유재산 시행령에서는 1차년도에 대부료율이 고정되어 임대차기간(5년) 간 변동이 없도록 규정됨 (제안) 대부료 계산식에서 고정되어있는 대부료율을 필요 시 매년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변동가능하도록 조정 (검토) 경기불황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상가 임차인의 재정적 부담을 감정평가를 통하여 신뢰감 있도록 완화 가능.

구분	유형	분야	시민제안	주요내용
6	법령개정	일반행정 /복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연령제한 연장요청	<p>(기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령제한은 24세</p> <p>(제안) 장애인 또는 필요시 연령 제한 연장 기능토록</p> <p>(검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 지적정서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연령인 24세 이후에도 지원센터 혜택이 가능함</p>
7	조례 제개정	일반행정 /복지	자치구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를 인근 자치구까지 확대 요청	<p>(기존)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구에서만 사용 가능</p> <p>(제안) 자치구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를 인접 자치구로 확대</p> <p>(검토) 해당 자치구 내 지역경제 활성화의 취지가 훼손됨에도 불구, 수요자인 시민의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임</p>
8	조례개정	일반행정 /복지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요청	<p>(기존) 비무장지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근거 부재</p> <p>(제안)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4항에 비무장지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p> <p>(검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공훈을 선양하고 예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존재</p>